

(재)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좌담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오후 16시

장소: 한국선진화포럼 사무국 회의실

2020



진행 순서

진행

- 사회

- 김용하 (한국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 순천향대학교 교수)

- 발제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하 (사회) :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입니다. 한국선진화 포럼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좌담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내년도 2021년 세계 및 한국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하신 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계신 동덕여대 김태준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태준(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김용하 (사회) : 그 다음에 인천대 무역학부의 옥동석 교수님이십니다.

옥동석(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네, 반갑습니다.

김용하 (사회) : 단국대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님이십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김용하 (사회) : 그럼 지금부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담회 시작은 일단 우리 2020년 현재 한국경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내년도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태준 :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업자들에게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심한 상황이라서 우리 경제가 물론 그동안 코로나를 어느 정도 방역을 다른 나라보다 잘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중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나은 편인데 최근에는 그 상황이 급반전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정도 예상했다가 최근에 경제성장률을 조정했습니다.

-1.1%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예상이 내년이 되면 코로나가 백신도 개발이 되고 접종도 하다보면 선진국을 위시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나라도 올해 백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코로나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의 감염에 대한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진국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도 반등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2.2%~3.0%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잘 대처하면 3.0%보다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김태준 교수님은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2.3% 성장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주셨습니다. 김태기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 저는 단국대학교에 있는 김태기라고 합니다. 포럼에서 자료를 같이 올리게 될 텐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자료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국제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벌써 1년이 다가오고, 나라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료는 파일을 올려놨으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사실은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또 백신확보에 실패했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문제는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경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에 관심이 다 집중된 사이에 정책이 정치 놀음 때문에 다 흔들려서 그 결과는 지금 우리 경우 집값, 세금 폭등, 이런 게 중산층의 고민이라고 하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저소득 계층에게는 일자리 감소, 소득불평등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12월 16일입니다. 2020년이요. 이 시점에서 여전히 하는 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규제를 강화하고 노조의 특권을 키우는 정책을 하는데 사실 이 정책이 왜 문제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들고 성장도 못 하게 하고 일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불평등을 키우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헛돈 쓰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대책의 핵심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 재정 지원해서 코로나 경제를 막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의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으로 쓴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마치 선심 쓰 듯이 경기도 키우고, 뭐든 걸 다 하는 만병통치처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도 못 잡았습니다. 재난은 재난대로 더 심해지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급기야 기본소득이 나오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 거죠.

사실은 금년도 경제성장에 대해 한국은행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너무 대통령에 붙들려있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1.1%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악화되는 사정을 보면 금년도 경제성장은 제가 볼 때는 -2% 쉽지 않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재정 부문을 빼버리면 실제로 순전 경제성장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주가가 왜 이렇게 뛰고 좋아요? 대통령은 주가 3000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은요 첨단 제조 대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폐로 몰리면서 그동안 축적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적자입니다. 국가산업공단 이런 데는 이미 존폐위기에 가있고 중소기업 부분은 회사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책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책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잘했어.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대만은 어떤가요? 중국은 어떤가요? 사실은 OECD 비교하는데 OECD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요,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와 똑같이 비교하죠? 어떻게 유럽과 똑같이 비교합니까? 결국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나라는 손에 꼽히는 나라가 있어요. 대만,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와 비교해야 합니다. 저 나라,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볼까요? 대만 한 번 보겠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됐냐. 우리랑 많이 달라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정부 시장통제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나라예요. 애네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과거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그 후 방역 경험 살려서 처음부터 입국 통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확산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입국통제 처음에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가 대만이 방역문제에 성공을 하다보니까 경제 부분에서 아주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그럼 애네는 경기부양 어떻게 했냐. 우리 처럼 재난지원금 준 게 아니예요. 애네도 똑같습니다. 취약계층 어려웠습니다. 소비를 일으켜서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결국 중소기업들, 수출하고 이거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 문 닫은 사이에 대만은 공장이 돌아가니까 수출이 잘 될 수밖에요. 대만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9%입니다. 29년 만에 중국을 앞서는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김용하 (사회) :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해주세요.

김태기 : 그 다음에 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이고 살벌한 나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2%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은 대만과 비슷한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굉장히 산업을 키우고 이런 쪽으로 성장해서 극복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경우는 사실 국가통제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냐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고요, 특히 공산당이 지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랑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그러면 옥동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옥동석 : 네, 인천대학교 옥동석입니다.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기 동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팔로우업을 하는 전공이 아니다보니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의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사실 OECD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방역이 선방을 했고 GDP 성장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고 오히려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또, 그리고 경제전반에 대한 봉쇄조치도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만 백신을 전국민에게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또 그리고 영국 미국 등 백신을 확보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국중심주의로 먼저 경제를 운영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인 경제여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 극복, 위기 극복에 따른 효과도 그렇게 많이 입을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대내적으로도 백신 없이 지금과 같은 이런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는 재정 쪽을 계속 보다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재정이 건전하다는 인식이 많고 그러다보니 재정의 투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투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경제운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리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문재인 정

부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주창을 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한 마디로 소득 분배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내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정말 총공급 측면의 경제 한 쪽 부분은 아예 무시하는, 그리고 또 소득재분배가 경제 총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다지 감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김태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 양쪽 측면을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총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의 의욕을 꺾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총수요만 계속 관리하고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해감으로써 결국 부동산 버블을 주식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내년도 경제는 더욱더 위기에 취약해질 것이다. 대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대내적인, 우리가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경제는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대면의 경제활동들이 앞으로 우리가 뉴노멀로써 굳어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가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위기가 도래할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어쨌든 김태기 교수님은 금년에는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김태기 교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내년에도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옥동석 교수님은 그래도 우리는 선방했지만 내년도는 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 경제는 쪽 올해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경제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두세 가지 정도, 긍정적 요소든 부정적 요소든 제약적 요소든 어쨌든 내년도 경제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야한다는 것.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교수님이 좀 더 말씀해주시지요.

김태준 : 내년도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모든 국가들이 유동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산시장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만 충격이 와도 자산가격이라든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각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트렌드 자체는 올해 보다는 경제가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옥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산가격이 실물부문과 괴리된 높은 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주택가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폭등.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 가운데 중위아파트 가격상승이 정부는 14%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52% 올랐다는 게 맞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이 올랐다고 해서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가 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그 주택 값이 계속 오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만약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향으로 간다고 하면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값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차대조표의 불일치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면 부채를 갚는 데 돈을 쓰다보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데 아까 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거품 낀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르면 소득을 소비하는 데 쓰지 못하고 저축해서 돈을 갚는 데 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방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1월 민간 가계 저축율이 작년보다 4.1% 오른 10.2%로 증가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든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현상이 앞으로 물론 이것은 아파트를 사려고 돈을 아낀 것일 수 있지만 거꾸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높은 가격에 산 것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부채증가가 갖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증세, 세금을 지나치게 여러 가지로 매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진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0%예요. 근원인플레이션, 근원인플레이션이란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산품 가격을 뺀 물건의 인플레이션율을 따진 게 근원인플레이션인데, 근원인플레이션이 0.1~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머스라든지 미국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구조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총수요 자체가 굉장히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채가 확 늘어났죠. 저출산 고령화가 확 되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된 이유도 경상수지 흑자라는 걸 따져보면 소득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나머지도 경상수지 흑자로 가는 거거든요.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외화자산이

늘어나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감과 동시에 경상수지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삶의 질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막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그러기 때문에 서로 언제 누가 금리를 올릴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려면 실물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실물 부분이 아니라 자금시장에서 예를 들어 국채를 너무 발행하는 바람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1년 사이에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의 수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산가격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만의 문제 플러스 앞으로 향후 4~5년 동안 가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코로나가 없어도 2018년, 19년부터 굉장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3저,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이런 3저 현상이 있는 국가인데 1980년대 3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3저는 우리 경제에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런 3저 현상 하에서 여러 가지 경기선행지수, OECD가 제시하는 경기선행지수와 기업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를 보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겹쳐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마취제를 맞은 것 비슷하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 가계도 마찬가지로 빚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으로 쓴다든지 하면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빚을 빌려서 자기가 좋은 자동차 사고 소비에 써버리면 빚을 어떻게 갚아. 먹고살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빚을 얻어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빚이 다시 갚을 수 있고 경제를 살어나게 하려면 결국 그 소비라는 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국가의 생산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재정지출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은 물론 올해와 비교해봐서 여러 경제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3저 현상의 지속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대비를 못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질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용하 (사회) : 그러니까 우리 자산시장의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등과 결합되면서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계속 향후에 위기가능성이 지금 점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태기 교수님께서 내년 경제를 볼 때 이 포인트를 봐야한다고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김태기 : 우선 내년 경제에서 아주 굿뉴스 배드뉴스 볼까요? 굿뉴스라고 하면 수출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상당히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 것 같고요, 굿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자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의 잔치고 결국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수출이든 파티에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플랫폼에 같이 타야 수출도 할 텐데 그에 대한 인프라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토탈해서 보게 되면 수출이 내년도에 우리가 믿을 만한 데고, 내년도에 가장 나쁜 뉴스하면 어떻게 하죠?

내년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죠? 바로 내후년에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도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이 끝판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금년도에 이미 예고되었던 겁니다. 최근에 기억나시죠? 동남국제신공항. 그게 김해 하기로 했던 것 갑자기 부산에 가덕도 이렇게 가는데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기업규제3법, 노조특권3법 한 것, 그 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땐 내년도에는 더 하지 않을까. 특히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재정이 파탄이 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건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최대 악재는 정치리스크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바깥소식을 같이 봐야할 거예요. 왜? 코로나란게 전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이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습니다. 풀면서 어떤 나라들은 재정이 튼튼한 나라들은 괜찮은데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무너집니다. 이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에서 벌써 착수한 것이 뭐냐면 유동성 때문에 특히 남미, 유럽 중에서 남부 유럽 이런 쪽은 굉장히 재정위기가 올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예외냐. 우리나라도 지금 IMF한테 경고장 받았어요. 당신네들 재정 좋은 건 아는데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리고 재정 믿고 최저임금 막 올리지 말라고 IMF에서 경고했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금융 쪽이라는 건 살벌합니다. 한 번 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이 재정이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튼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자금들이 싹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부문에 있어서 정리하자면 제일 큰 위협요인은 국내 정치리스크, 포퓰리즘, 그 다음에 국제정치리스크 부문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때 그나마 믿을 만한 데가 수출이고 수출에서 대박을 터뜨리려면 모든 총력 기울여서 중소기업 수출할 수 있도록 K-브랜드 효과 살려서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데 전력투구해야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옥동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옥동석 : 네, 사실 요즘 나훈아 테스 노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은 항상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처지를 항상 감안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우면 우리가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을 100개를 놓고 보면 우리 영향력은 1개라는 사실이죠.

재정을 보면, 사실 저도 지금부터 15년 내지 20년 전에 국가채무비율이 60%만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걸로 봤는데 지금 OECD 국가들은 80%, 90%, 100%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하느냐. 물론 저금리가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를 보면 상당히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냐. 대개 다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정부의 국가 채무비율이 한 50%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가 40% 돌파하고 난 뒤에 45%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전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부채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를 미국, 일본, EU 등과 같은 큰 나라와 비교해서 지표를 비교하니깐 우리 괜찮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처지를 알고.

그래서 또 최근에 언론에 난 뉴스를 보면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간 게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세계가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R&D 활동의 경쟁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치열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세계 경쟁력에서 뛰어날 수 있는, 우리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재벌들의 여러 가지 나쁜 그런 현상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작은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기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경제정책과 전략을 짜야 될 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 즉,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김태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정당들이 오로지 집권을 하기 위해, 물론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한 정치경쟁에 들어선다는 건 당연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즉, 어떤 정당의 공약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보셔야 되지 당장 나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지금 어차피 여야 정당 간에는 포퓰리즘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일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재난지원금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눈여겨보는 국민들의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야당이 굉장히 선방을 해서 항상 투표함을 터뜨려보면 야당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신문, 언론지상에 난 구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어도 안 찌는 민주배짱!”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퍼주더라도 받을 건 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정당의 공약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전세계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런 점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우리의 정치가들이 그제서야 저는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사회) : 그래서 세 분 우리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일 큰 위기 중 하나가 부동산, 주가 등이 사실은 폭등하고 있어서 올해 좋긴 좋은데 실물 경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동산과 주가가 폭등해서 이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게 계속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준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아까 소프트랜딩도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 상당히 전세계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금리 플러스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이 풀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외국의 선진국처럼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사서 그야말로 일종의 머니타리제이션을 해서 돈이 풀리고는 아직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 주가 전에 생활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 한 10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지금 가계부채의 GDP 대비는 한 100.4%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도 110% 정도 되기 때문에 IMF가 그럼 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은 주의 단계에서 경고 상태로 갔다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서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계가 왔는데 과연 부채를 우리가 제일 좋은 건 그거죠. 부채를 얻어도 소득이 늘어나서 그걸 갚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안 늘어났는데 부채가 늘어났다. 언젠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갚으면 결국 파산하고 부도가 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갚으려고 하다보면 결국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을 갚다보면 지출을 못하게 돼서 그게 다시 소위 역설이 생기는 거죠. 지출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는데 그러면 부채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앞으로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금처럼 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그 이야기 옛날에도 금융위원장은 자기 방에다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 그래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걸 실제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면 보다 더 사회가 안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50%씩 뛰는 나라에서 부채가 안 늘어납니까. 근본적으로 집을 사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이 어느 것이 선후가 되느냐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자산을 사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 돈 플러스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 지어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기초를 안 바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동산과 관련 되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간단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지금 부동산 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요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안 해요. 왜? 부동산 값 오르는데 부동산 왜 팝니까. 그러니 공급 안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기존 주택은 줄어들고 플러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지난 정부 3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45% 내지 50%밖에 안 돼요. 신규분양도 적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팔려고 안 내놓고. 그러니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요자는 아

파트 값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오를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돈을 안 꾸려고 할 텐데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주어야 사람들의 기대가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주변을 변방을 올리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싶단 말이에요. 에쿠스 타고 싶어. 그런데 자꾸 아반테 타고 다니라고 하면 아반테 타겠습니까. 에쿠스 타고 싶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줘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겠네 이래야 진정이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도 이상한 식의 그런 경제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꼬이게 된 거고 꼬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정치경제와 맞물려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가계부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줄이려고 하면 결국 경제가 성장을 해서 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돼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갚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죠. 정부가 만드는 허접한 일자리는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소득이 발생하는데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

그런데 기업을 갖다가 요새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기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같이 주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지 오로지 채찍만 가지고 하면 일자리 누가 만들고 누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누가 빚을 갚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그야말로 4~5년 지나면 저성장이 아니라 거의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빚을 얻습니까? 자기 소득이 안 생기니까 돈 미리 당겨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기업규제3법도 나오고 노조법 개혁도 나왔지만 그거 잘못된 부분 고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받는 충격이 약간 그걸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기업이 적응할 수 있게끔 고쳐나가는 것이, 지난번에 최저임금도 뭐니까? 4년 동안 평균하면 지난 정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2년 동안 28% 올려버리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결국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0% 올리고 이게 뭐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기업이 수용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하고 플러스 예를 들면 강력한, 돈 안 들고 기업 투자 늘릴 수 있는 방법 많거든요? 그게 뭐니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만.

부채 문제가 우리의 암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중국이 지금 지방은행이 부도가 나고 국유기업이 부도가 나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선진국이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했을 경우 그 충격이 우리나라에 엄청 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인데 만약 그게 2%로 올라간다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도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르는 외부충격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감안했을 때는 빨리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서 그런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바로 이어서 사실 올해 기업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노동법도 어떻게 보면 성장을 촉진한다기보다는 성장을 앞으로 발목 잡는 법들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두르고 있고요. 또 근로시간 52시간제한을 중소기업에 확대하는 문제 등등해서 굉장히 지금이 규제법들이 올해도 극성을 부렸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전문가이신 김태기 교수님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시죠.

김태기 : 혹시 여러분 지금 기업규제 3법, 공정규제 3법 그러는 거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조 3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기업규제, 공정규제라고 하니까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3법, 그 다음 공정거래법, 그 다음 금융그룹감독 그런 새로운 걸 만드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벌이 총수가 너무 전횡을 하니까 잡아야 해. 그 잡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데 그게 선임만 하면 1인 1표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식 많아도 3% 이상 안 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취득한 다음 우리 몇 사람 합쳐서 저 사람 몰아내. 투기자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투기자본이 며칠 만에 딱 회사를 접수합니다.

삼성처럼 큰 회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대기업이 되려고 정말 꿈나무 중견기업들, 혹시 여러분들 주식 하시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주식투자하는데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 시총이 2000억 정도면 3% 정도 인수하면 60억이면 그 회사 거뜬히 먹어버립니다. 누가 먹느냐. 지금 중국기업들은 우리나라 핵심기업들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반도체기술 난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 것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회사 믿고 꼬박꼬박 월급 가지고 주식투자 하셨죠? 그 날로 주식 그냥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사실은 기업규제 3법이 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일을 당했어. 투자할까요? 안 하죠. 투자를 안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그 모양이거든요. 사실 지금 기업규제 3법이 정말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국민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 3법은 더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보호도 해주고 노동자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법이 노동조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버렸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불법파업을 해서 해고된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로 못 들어오잖아요? 노조 간부로 들어와서 회사로부터 사무실 제공받고 급여를 받고 또 파업 준비를 일으켜. 또 파업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전엔 애매모호했는데 이제는 사업장 내에서 아무 문제없어요. 파업이 무슨 노동력 제공 안 하는 게 파업이지 지금은 점거 농성도 다 하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업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합원들 보면 여러분 노동자 별로 실감 안 날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10명 중 1명만이 조합원입니다. 그 1명이 누구냐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남의 이야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결과는 뭐냐면 대기업에 그런 정규직에 조합원인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월급 3배 더 많이 받습니다. 다른 나라 그런가요? 아니예요. 다른 나라 잘해봐야 1.5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합원되면 신분이 바뀌어. 그런 특권을 만들어준 법인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세금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 들려야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어떻게 했죠? 강남집값 잡아. 재개발한다고 돈 벌었어. 그거 잡는다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몇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잡는다고 다 잡으니까 젊은 친구들, 30대들, 완전히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태준 교수님 최저임금 말씀하셨죠? 최저임금 나오니까 박수 치셨잖아요. 어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어. 특히, 청년들 경우에는 일자리 씨가 말랐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일자리 없으시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옥동석 교수님 진짜 말씀 잘 하셨어. 여러분, 표 찍을 때 먹는 건 먹어도 표는 찍지 마세요. 민주배짱이라고 표현하시던데 맞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묘하게 사람 이간질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 주자. 그러면 다 잘 살아. 뭘 잘 살아. 부동산 해서 잘 살았습니까? 최저임금 했습니까? 기업규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사실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더 판을 칠 텐데요 정말 다수를 위하고 다수의 힘없는 사람, 다수의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

면서 있는 사람들 때는 이런 부분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포퓰리즘의 희생이 누가 되냐면 뭇 모르고 박수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손해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많이 손해 보셨죠?

사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포퓰리즘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거고 결국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요? 대통령? 대통령도 포퓰리즘인데? 결국 막는 건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살고 민주주의가 좋은 나라들은 이런 거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 판단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남미가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그리스 뉴스 많이 보셨죠? 엄청 잘 산다고 했다가. 이태리, 스페인 다 급락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 스스로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하 (사회) : 네, 포퓰리즘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금년도도 재정적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정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558조 되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적자에다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생겼고요. 사실은 옥동석 교수님이 국가부채에 대해 최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포퓰리즘이 내년, 내후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런 저런 포퓰리즘이 판을 칠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복지정책 확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가재정관리나 포퓰리즘이 판을 칠 때 국민들이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인지 교수님의 혜안을 말씀해주시지요.

옥동석 : 사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굉장히 가깝고 존경할 만한 학자,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정치인들의 본질이란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의, 국민, 이런 미사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정치인으로서 일자리를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포퓰리즘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공약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해주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먹히네'라고 해서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를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자율적으로 참여

해서 일부는 수요자로 일부는 공급자로 참여해서 거기서 결정된 민주적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다, 불공정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법원 판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가격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걸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 다수가 결정한 가격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 그것은 바로 통제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해놓고는 그것에 따른 피해를 재정지원으로 막아줘야겠다.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으로 해서 만들어야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재정 지원하겠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청년저축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또, 공공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가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준칙입니다. 재정준칙이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수지균형을 지키라는 겁니다. 수지균형을 지키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국의 재정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획득한 아주 소중한 원칙입니다. 재정민주주의가 원래 조세법률주의, 즉, 국왕의 조세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정당을 형성해서 서로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그리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 등을 위시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 전의 중상주의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 많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 중상주의는 금과 은이 국가의 부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자 해도 국내에서 금은 그대로더라는 생각에 젖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수지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5년을 책임질 정부는 5년 동안 수지 균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지 균형을 하라고 하면 지금 재정 쓸 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일이나. 독일을 한 번 참조해보세요. 독일은 수지균형의 준칙을 확립해놓고 GDP의 0.35%는 균형재정으로 인정해줄게라고 헌법적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주기 내에서 경기가 좋아질 때는 흑자를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를 하는 식의 경기 대응에 대한 여유를 주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코로나 재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용인하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을

풀 수 있도록 국회의결로 만들어준다. 이런 정도의 재정준칙을 하고 재정준칙을 지키도록 전문가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사람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연하고도 체계적인 재정준칙을 시행한 나라가 독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하자.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범위를 정해주자는 거죠. 정해줘야만 창의력이 나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죠. 궁하면 변하고, 궁즉변, 변즉통, 사람들이 변해야 통할 수 있고, 또 마지막, 통즉구, 통해야 지속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게 그리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정이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파탄에 이른다고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왜 이걸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전망이 잘못되었으면 자꾸 연구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김용하 (사회) :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정서 변동 중 하나가 미국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끝나가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있었던 미중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중간 사이에 끼어서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김태준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준 : 네, 원래 지금 쪽 국내문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같은 나라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문제보다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강대국들의 세계운영전략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국제정세라고 하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일종의 패권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패권전쟁이 무역부문에서 갈등으로 나타나다가 기술 쪽으로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아마 통화전쟁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세계 국제 시장에서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세계적인 패권국가 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기들끼리는 편하다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면 그 화폐가 쉽게 쓰이게 함으로 인해서 전세계에서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본 거래에도 위안화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원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중국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때 IMF에서 세계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국제통화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 중국인민은행

이 중앙은행인데 그 인민은행 총재가 뭐냐면 SDR로 확대하자, 세계 국제통화로서.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차선택이 뭐냐면 SDR로 포함되는 통화에 위안화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위안화를 집어넣었어요. SDR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 바스켓이에요. 통화 바스켓에 주요 5개 국가들의 통화가 들어가있는, 비중은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중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바로 디지털 통화인데 디지털 통화를 통한 자본에 있어서의 위안화의 국제화는 앞으로 30년? 20~30년 훨씬 더 걸릴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실물부문에서 패권전쟁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패권국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전세계에서 역설을 봤을 때 패권국가가 바뀐 게 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세 번만 빼놓고는 다 전쟁을 통해서 패권국가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국가가 넘어갈 때는 전쟁이 없이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예외고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같은 전세계에서 모두 강대국이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다른 형태로 패권국가가 넘어가는 형태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계 GDP 중에서 약 24%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 17%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로 보면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의 GDP를 넘어섰어요. 그때 일본이 충격을 받았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중국이 됐는데 그럼 언제 양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설 것이냐. PPP라는 환율로 계산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30년 정도로 봅니다. 2040년 내지 2050년 되면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상황을 미국이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막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사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아까 말했지만 통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실물 부문이고 또 실물 부문이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중국의 아주 값싼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아주 값싼 물건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 여러 혜택을 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잡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즘이라는 게 미국에서 확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떠냐.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바뀌게 된 상황인데 바이든은 미국의 그러한 국익을 위한 것에선 변함이 없죠. 정치지도자가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와 같은 그런 방식, 예를 들면 미국의 우선주의, 동맹무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미국이 그런 자기들의 그런 국익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외교상원위원장도 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국가들과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동맹국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안보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충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한국이 요새 코어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끼지는 못했지만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 대응해야 하느냐.

우리가 최근에 비근한 예가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이 보복을 해왔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냐가 굉장히 어떤 상황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특수하게도 북한의 핵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7%가 수출에다 수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미국에 40% 수출하고 중국에 38% 수출합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갈등을 일으켰다. 어떻게 되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봉착해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일방성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우방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예를 들면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뭐 와인보복을 당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와인을 사준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지요? 호주는 수출의 40%가 중국에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를 빨리 해야 돼요. 중국 의존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중국한테 하는 거는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지역을 조금 더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좀 더 수출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자꾸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한 국가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CTPP라고 트럼프가 TPP에선 탈퇴했는데 새로 CTPP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예요. RCEP이라는 것은 미국이 빠져있고 ASEAN 플러스 세 개 국가가 일본, 중국, 한국이 참여한 지역무역협정이 RCEP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CTPP라는 것은 중국이 꺼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탈퇴했고 한국도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빨리 가입을 하고 그러면 미국도 가입을 할 겁니다.

가입을 한 상태로 조금 더 우리의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다자화에 참여를 하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한중일 간의 FTA를 좀 더 체결을 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책이 효과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화, 바이든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지속되고 오히려 첨예화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중국 진출.

또 하나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가 일단 소화되어야, 누군가가 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국채의 95%가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 예를 들면, 저축, 우체국 거기서 사주는 거거든요? 일본

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외국인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일본 국민들이 사는데 우리나라 국채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평가가 높은 국가인데도 금리가 있으니까 외국인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가 과연 얼마까지가 잘 소화될 것인가. 국채가 소화 안 되는 순간 그 나라가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도 오르고.

그거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채 15%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15%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중국 인민은행이 자국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실력 있구나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 아까 실물적인 의존도뿐만 아니라 통화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국채에 중국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어떤 협박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 그럼 중국이 어떤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객 그걸 제한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국채를 팔아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 국가의 그런 상황을 알면 얼마든지 그걸 카드로 쓸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 국채가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의해서 너무 많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외국인,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중국인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따라서 제주도 경제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중국하고는 미중 갈등이라는 것에 의해서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은 내년의 화두 중 하나가 지금 실업률이 3.6~3.7이어서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고용구조를 보면 60대 빼놓고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동전문가이신 김태기 교수님, 일자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기 : 네,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김태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붙여서 마무리하죠. 우선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전혀 다른 체계를 기획 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가 볼 때 가장 한가한 소리가 뭐냐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사이에 한가한 소리가 통했던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각 나라별로, 개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무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서커스를 한다고 할까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가능했는데 바이든은 뭘 표방 하나면 다자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동맹강화를 내걸어요. 쉽게 말해서 장사논리

로 외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랑 다른 길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꼭 빠져있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은 바이든에게는 너 참 못됐구나,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분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 착각에서 빨리 깨야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안 그러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다 모두에게 지금도 불신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예뻐합니까? 미국이 우리를 신뢰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전통산업 위주로 구조를 짜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는 신산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신산업 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수소 이런 부분이 꽤 우리가 체력을 쌓아왔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해서 그런 부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 나라 면에도 기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힘줘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김태준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중국에서 15%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만이 아니예요. 우리나라 기술, 그리고 핵심인력들 자꾸 중국으로 빼 가는데요 어느 나라가 그걸 놔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정권에서, 당장 제가 볼 땐 내년부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할 게 안보경제기본법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잘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자원들 유출 안 되게 해야 하고요, 최근 중국에서 법 통과시킨 거 아시죠? 중국은 오히려 법 통과했는데 수출 관리법입니다. 수출 관리법이란 이름하에 모든 걸 정부에서 중요한 건 통제하는 거고 미국은 진작에 있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면 안보경제기능법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출시장 다변화 이야기하셨는데, 김 교수님, 저는 공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전부 대기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많은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개미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대금 나갔을 때 위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위험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이 안보경제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오늘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문제인데요, 우리 실업률은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4% 믿으세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20대 청년들 한 번 볼까요? 공식 실업률은 우리가 한 10% 좀 넘어요. 그런데 체감 실업률은 얼마지 아세요? 체감 실업률은 뭐냐면 실제로 일 안 하는 사람 플러스 일을 하긴 하는데 일 같지 않은 거. 그게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게 25%예요. 4명 중 1명입니다. 우리가 왜 그 실업률을 보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표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르신들 일자리, 공공 일자리, 그게 일자리 맞나요? 그건 사실 일자리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조, 복지 차원에서 해서 돈을 주는 이런 형태인데 말이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일자리라 하니까 실업률은 한 4%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우리나라 평균 전체로 14%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청년들은 4명 중 1명입니다. 우리가 이게 실업이 낮다고 이런 이야기 저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아까 옥동석 교수님이 국가 채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하면 OECD 평균이 70~80%라고 하는데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실업률 낮습니다. 그런 나라는 국가 채무가 어떻게 될까요? 한 30% 대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노동시장이 무지하게 경직적입니다. 노동조합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국가 채무가 100%가 넘습니다. 대략 100%, 30% 평균하면 얼마 되죠? 그럼 7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하면 OECD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업률 문제를 정부가 재정 가지고 풀어서 해결한다는 건 오히려 실업률 악화시킨다. 왜 그러죠? 보세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 실업률 줄인다고 정부가 돈을 풀었더니 정부가 돈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 거두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거두지 않습니까? 기업이 투자할 돈을 가져간 거예요. 개인이 소비할 돈 가져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에서 만들어야 할 일자리를 정부가 다 해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는 금년도 한 100만 개 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에 서비스업에 일자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체감실업률이 14%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업률 문제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잘하는 건 성실한 거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하겠다는 사람 자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들어서 내년도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주 52시간제를 내년 7월 1일부터는 49인 이하 기업체까지 다 적용을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 그러면 근로시간이 68에서 52로 거의 사분지가 주는데 근로시간 주는 만큼 소득이 줄어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그럼 인건비가 덜 듭니까? 아니죠. 원래 법정인건비 다 드니까 줄이려고 해요. 결국은 일자리도 줄고 근로자는 소득도 줄고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실업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업률 줄이려면 쉽게 말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일 더하게 만들고 기업이 예를 들어 더 투자하고 싶게 만들고. 이게 실업률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볼 때 다른 부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게 자영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고용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문제인데 자영업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4명 중 1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영업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밀릴 데가 없습니다. 자영업이란 게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전업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IT 플랫폼 타서 새로운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다 실직의 길로 갈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실업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아 그래요 고용 유지하세요. 돈 주는 것. 박수치지 마세요. 그거 끝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실업률 줄이고 우리가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기술이 바뀌는 데 쫓아가고 정부가 그거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제경쟁력이 또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옥 교수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옥동석 : 네, 사실 앞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을 보고 한국이 처한 위치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시다만 사실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볼 때, 사실 국가간의 주권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주권평등의 국제질서를 과연 어디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민 평등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번영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택은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권평등, 만민평등에서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이런 사회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행하고 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번영을 가져왔던 질서에 대한 존중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원리에서 저는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는 사실 느끼는 게 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분배를 위한 정책을 분할시켜서 생각하자.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배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배정책을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적인 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노동시장이라든지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배적인 측면을 넣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실 정책의 목표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뭐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온갖 좋은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인권, 안전, 보건, 복지, 노동권, 기회와 사회 통합,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 보전, 모든 가치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도대체 뭐하자는 이야기냐 이거죠. 시장경제원리라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제1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열심히 하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펫, 클라리넷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잘 조화시켜서 종합적인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개별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할지 몰라요. 인권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이런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때 뭘 해야하지?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죠.

그 다음 이런 모호할 때는 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결국 정부고 정치인이 되고 결국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결국 정치인들에 의한 통제,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판단.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질서를 형성할 때는 개별 사람들에게 너의 이익을 추구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라.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라. 당신이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하여간 이 구조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라고 명확한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모호하게 흐뜨려놓게 되면 뭘 해야 할지 사람들이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 정치에 의존하게 되고 정치에 의존하게 되면 특정한 가치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라. 그런 목표 자체를 절대 흐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그럼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줄여나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즉,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우리가 사실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능률과 실질은 굉장히 숭상하라. 이념보다는. 그런 능률. 효율. 원가를 절감하고 똑같은 원가 내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형태의 정치인들의 언급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과연 우리의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은 뒤쳐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줬던 주권의 평등, 만민평등의 사상,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또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면서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이 되어야만 정치인들이 경제적인 변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토론해야 할 주제는 많습시다만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께서 어떻게 보면 매듭이랄까요? 그런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교수님부터.

김태준 : 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포퓰리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포퓰리즘이 아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잘 본질을 이해해서 선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퓰리즘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게 포퓰리즘을 하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굴 타깃으로 하나면 바로 어려운 사람, 대중.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중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를 얻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 포퓰리즘에 포획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었을 때도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연 내가 저 사람만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포퓰리즘에 포획이 돼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페론이란 사람이 계속 대통령 하고 부인도 대통령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본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진짜 포퓰리즘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경제적인 단계에서의 차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의 근본은 역시 우수한 인재, 성실성,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향후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믿을 수 있는 게 교육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혁명이 있어서 교육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대학 있죠? 우리 다 대학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지금 대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구조가 바뀌는데도 대학은 여전히 똑같아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비슷해. 그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왜곡이 생기지.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돼서 대학 안 가도 되는 일이 막 생겨요. 그런데 점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의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값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환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학벌 위주. 좋은 대학 가야지 된다 하는데 좋은 대학 가야 그 사람 능력이 인정받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계층의 사다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대학교육 방식 싹 바꾸고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가 에듀테크예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가거든요? 대학교육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 상당한 자원을, 우리나라는 교육예산의 20%밖에 대학에 지원을 안 합니다. 다 초중고등학교에 가요. 그 예산을 보다 더, 진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결과가 10년 후에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또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편.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경제학자들도 더 심각하게 연구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태기 :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계속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9%입니다. 1990년대에는 7%입니다. 2000년대는 우리가 5%입니다. 2010년대는 3%. 지금 1% 이렇게 가는 거죠. 9, 7, 5, 3, 1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라고 하면 성장이 멈춘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뭐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격감했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국민 간의 신뢰가 무지 떨어져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져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하면서 제도라는 걸 선거를 위해서 제도라는 걸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 제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 순영터리로 만들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무서워, 너무나 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의 지금 성장속도는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속도보다 느립니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국은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재산권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율을 부여하면서 성장해온 나라고요, 우리의 경우는 자본은 없는 것 털어서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뭘 원하죠? 정말 우리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입니다. 옛날처럼 돈 풀어서 노동력 막 쥐어짜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 아이

디어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제도를 만드는 건 결국 정치가 하는 거고요, 결국 정치의 주인은 누구니까? 여러분, 국민이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못하느냐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경제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이런 자리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 선진화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기 주권에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 가질 때 선진화된다고 봅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옥동석 교수님.

옥동석 : 네, 오늘 선진화포럼이 전 남덕우 부총리가 설립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1961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한민국의 전 경제학자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남덕우 교수만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글을 어디서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이라고 하면 밀수하고 나쁜 짓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덕우 교수는 기업가들만이 이윤동기 하에서 최대의 창의력을 내놓을 수 있다. 이 사상을 굉장히 높이 사서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다가 그래서 화폐개혁도 하고 별 일을 다 했죠. 그러다가 바로 돌아서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적인 내용은 정치인들은 현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기 때문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를 푸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전문가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성과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비해가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보면 아주 호인이고 감성적이고 쇼맨십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문가들은 이성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증된 논리를 어느 정치인들이 잘 채택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정의라는 건 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epartment of Justice라는 건 법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의 정신을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 또

정의는 분배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보적 정의,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TV 프로에서 무슨 경쟁프로그램에서 성실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는 분배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정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효율, 그리고 기업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회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하 (사회) :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대응, 세 분 우리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 미증유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한국경제가 단 한 해도 평탄한 해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가가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의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들을 어떻게 내년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 교수님 감사드리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